일심회 수사 '백사장서 바늘 찾기'

장씨 등 3명 압수물·내사자료만 77만 쪽 분량
수사환경도 불리…검찰 특별수사팀 가동 검토

친북 비밀조직으로 지목된 '일심회' 사건의 일부 수사기록을 이달 10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야연실색했다.

1차로 송치된 이 조직의 총책 장민호(44.미국명 마이클 장)씨와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43)씨, 학원사업자인 손정목(42)씨 등 3명의 수사기록만 한 트럭 분량이 됐기 때문.

검찰 관계자는 12일 "압수물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다. 국정원이 이들로부터 수거한 컴퓨터 디스켓 및 USB 저장장치의 복사본과 길게는 십여 년간 모은 조사·내사 자료 등이 무려 77만 쪽에 달한다. 자료 정리나 분석에만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책 한 권이 200~300쪽이라고 가정하면 장씨 등 3명의 자료만 책 3천 권 안팎에 달하는 분량이고 최씨 등 2명의 수사 자료 및 압수물까지 넘겨받으면 그야말로 수사팀은 '산더미 증거물' 속에 파묻히는 꼴이 된다.

국가보안법 사범의 경우 불고지죄 등을 제외하고 10일인 조사 기간을 두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한 달을 꽉 채워 조사한다 해도 검사나 수사관들이 하루에 책 100권 이상 분량의 자료를 소화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해 일단 송찬엽 주임검사 등 공안1부 검사 전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피의자 2명의 기록이 송치되면 공안2부 및 다른 부서의 수사 인력까지 더해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린 뒤 한 달간 일심회 수사에 '올인'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아울러 국정원에 일부 압수물 분석을 맡기고 필요하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지휘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심회 수사 성과를 낙관할 수 없게 만드는 점은 옥석을 쉽게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자료뿐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정원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장씨 등이 묵비권 행사, 단식 등을 통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수사의 장애물이다.

나머지 구속자들도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으로 공동변호인단이 '변호인 조력권 침해' 등을 내세워 공안당국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

검찰은 변호인단과 만나 조사 과정에서의 참여나 심문 단계에서의 관여 수준을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씨가 미국시민권자인 점도 검찰에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연합뉴스

탈북자 1만명시대

한국전쟁 휴전 후 50여년만에
2002년부터는 年1,000명 넘어

북한을 이탈해 남한으로 들어온 탈북 입국자가 연말께 1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12일 통일부와 정보당국, 탈북자단체 등에 따르면 북한을 이탈한 뒤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자수는 지난 9월 말까지 모두 9천14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달 200~400명이 추가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현재 태국 480명, 몽골 170명, 중국의 한국영사관 80명 등 입국 대기자만도 730명에 달해 이달과 다음달 꾸준한 입국이 이뤄질 경우 연말을 전후해 탈북 입국자수가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995년 북한의 대홍수 이후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 늘기 시작한 탈북자는 2002년부터는 연간 1천명을 넘었으며, 1953년 7월 한국전쟁 휴전 이후 50여년만에 1만명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 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돼 인도주의적 지원까지 현저하게 줄어 식량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돼 북한 주민의 탈북시도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위기감시기구(ICG)는 지난달 탈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주변국들에 탈북자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아프간 한·미 공병대 합동 작전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에서 항구적 자유작전을 펼치고 있는 한국군 지원단 공병중대원들이 바그람으로 부터 200여Km 떨어진 샤라나 기지 공사 현장에 투입돼 미군병사들과 지휘부 건물 기초 공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성공단은 北 '돈줄'…사업진행 유보해야"

레프코위츠 美 대북인권특사

제이 레프코위츠 미 대북인권특사가 지난 11일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북한의 개성공단사업 이익금이 북한 지도부의 '돈줄'이 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개성공단사업 유보를 한국측에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날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모든 사실을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사업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안다"면서 "한국정부는 적절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개성공단 사업의 영향에 대해서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당초 올 여름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5일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로 미뤄진 바 있으며 이후에도 연내 방문 희망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지금까지 북한 개성공단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는 있지만 개성공단 사업의 유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그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미국과 일본간 논의에 한국과 중국도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또 탈북자 문제와 관련, 중국 정부가 최근 탈북자들의 미국행을 허용한 점을 언급한 뒤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정식 참여 않고 지지만 표명"

당정청, PSI 참여 현기조 유지

여권 수뇌부는 지난 11일 비공개 당정청 회동을 갖고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참여확대를 요청받아온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폭과 관련, 정식 참여는 하지 않는다는 현행 기조를 큰 틀에서 유지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숙 총리와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측이 요청한 PSI 8개 협력방안 중 한국정부가 참여를 거부한 PSI 정식참여와 역내 및 역외 차단훈련시 물적지원 등 3개 협력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PSI 공식참여 여부와 관련, 당정청은 핵물질 등 대량살상무기의 유출과 반입을 차단한다는 PSI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지지를 공식 표명하되,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과 지위 등을 감안해 한국정부가 PSI에 정식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당정청은 남북간 군사적 충돌 위험성을 감안, 역내 차단훈련시 물적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발효중인 남북해운합의서를 따르기로 했다. 또 북한의 사치품 반입을 막기위한 조치는 특별소비세법 등 국내법에 따라 조정하고, 기타 물적·인적 제재는 남북관계 관련법을 준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협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 부처간 협의를 거쳐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뒤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후속조치 통보시한인 오는 이전에 최종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혁신은 이뤄졌는가?

박치경 정치부 차장

노무현 정부의 슬로건은 '혁신'으로 집약된다. 참여정부의 혁신은 지역혁신과 행정혁신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지방에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균형발전을 꾀하자는 것이 지역혁신이다. 행정혁신은 공직사회를 탈바꿈시켜 효율을 높이자는 내부 쇄신책이다.

지난 7일부터 광주 컨벤션센터에서 시작된 '제3회 지역혁신박람회'가 12일 끝났다. 행사기간 동안 17만여명의 관람객이 박람회장을 찾았고 다양한 전시행사와 공연 등이 이어져 큰 성과를 거뒀다는 게 공동주최한 행정자치부와 광주시·전남도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금형산업 등 전략사업을, 전남도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조성(J프로젝트)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지역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과감한 혁신책을 제시해 큰 호응을 받았다. 여기에다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기관, 각 시·도들도 주목할만한 혁신방안을 내놓아 관람객들의 시선을 잡는데 성공했다. 지역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등장해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역혁신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내부 쇄신의 원동력인 행정혁신이 얼마나 진척됐느냐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책에 따라 공직사회에는 혁신을 전담하는 부서가 새로 생겨났다. 또 공무원들은 직급에 맞춘 혁신교육에 참여하고 그 결과는 소속 기관별로 평가를 받는다.

2006년도 행정혁신 만족도조사는 이달 중 실시될 예정이어서 아직 결과를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전남도 관계자에게 지난해 행정혁신 평가결과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내 "곤란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완곡한 표현이었지만 성과가 그리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셈이다. 혁신교육을 받고 돌아온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왜 교육을 하는 지 모르겠다"는 자조섞인 반응도 있다. 간혹 언론에 '혁신피로증'이라는 단어가 오르내리기도 한다.

행정혁신의 역사는 짧지 않다. 서슬 퍼랬던 박정희 정권 시절 등장한 '서정쇄신'(庶政刷新)은 아직도 공직자들의 뇌리에 살아 있다. 그러나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던 공직 내부의 혁신작업은 얼마나 성과를 거뒀는 지 가늠하기 어렵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일정한 양의 혁신을 이뤄내라는 것 자체가 비혁신적인 것이다. 항상 새로워지려는 마음을 갖되 내실을 다지는 게 오히려 알찬 혁신이다"라는 한 공무원의 말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unipark@kwangju.co.kr